

경기도의 고용복지 정책동향

2016. 04. 27

경기연구원
최석현

I | 민선 5기 복지정책 평가

보편적 복지 vs 효율적 복지

- 민선 5기는 2010년 무상급식 논쟁에서부터 시작된 보편적 복지 확대 속에서 급증하는 복지 재정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음
 -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제기된 무상급식 확대 공약은 이후, 대선을 거치면서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반값주택 등으로 보편적 복지 이슈가 급속하게 제기되었음
 -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행복을 향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정책으로써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으로선 복지수요자의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 도입
 -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계획 수립·시행

-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며 기본계획 및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 구축·운영

□ 민선 5기의 경기도는 이러한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에 앞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프로그램 전달의 효율성 강화에 초점

- 민선 5기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은 기존의 분절화되고 중복된 복지프로그램을 대상별로 융합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프로그램의 효율성 강화에 초점
 -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위기계층을 보호하는 사업
 - 무한돌봄사업의 지원대상은, 120%이하 위기우려가구, 중병, 폭력가정, 화재 등으로 주거생활 어려움, 주소득자와의 이혼, 실직 및 사업실패로 소득 상실 등의 가구임
- 무한돌봄사업은 2011년 시작한 이후, 경기도 지역 위기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와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
 - 2014년 무한돌봄사업 평가 시, 사업 신청한 가정 중 약 90%가 사업 참여를 결정받았으며, 참여후 만족도 또한 5점 만점에서 평균 4점으로 평가받았음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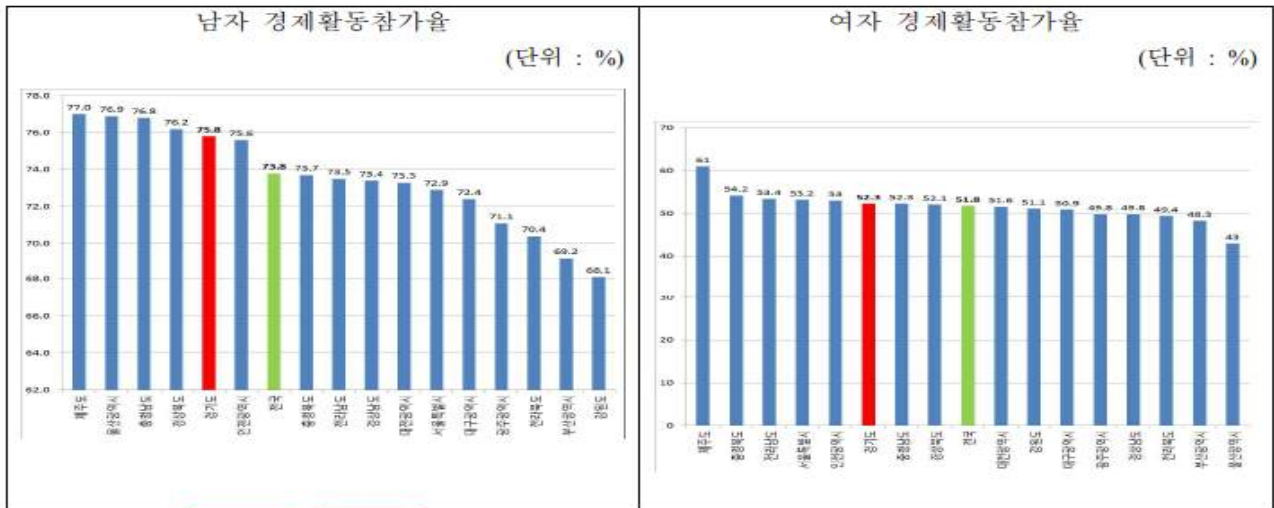
II | 민선 6기의 경기도 복지 환경

□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하여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

- 경기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015년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전국 4위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동일 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인천(64.2%)과 비슷하며 서울(62.3%)보다 높음
- 남자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23.5%p 낮음
 - 2015년 경기도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에서 5위를 차지하여 전체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더 나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경기도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울과 인천보다 조금 낮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3 -

<광역시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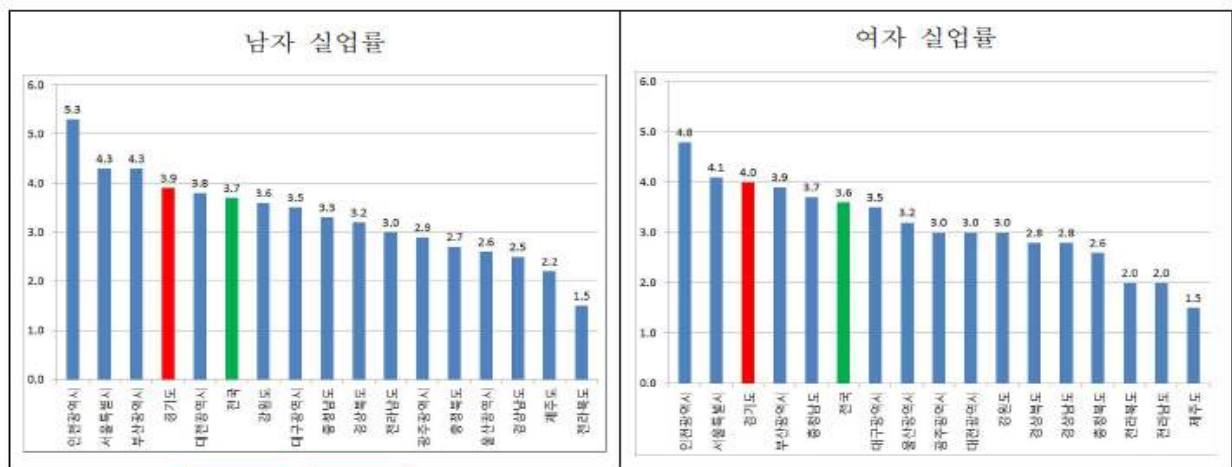


주 : (단위 : %), **경기 지표**, **전국 지표**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경제활동인구조사)

- 4 -

- 하지만, 경기도의 실업률은 2005년 이후 전국 실업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2013년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실업률을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음

<광역시별 남녀 실업률(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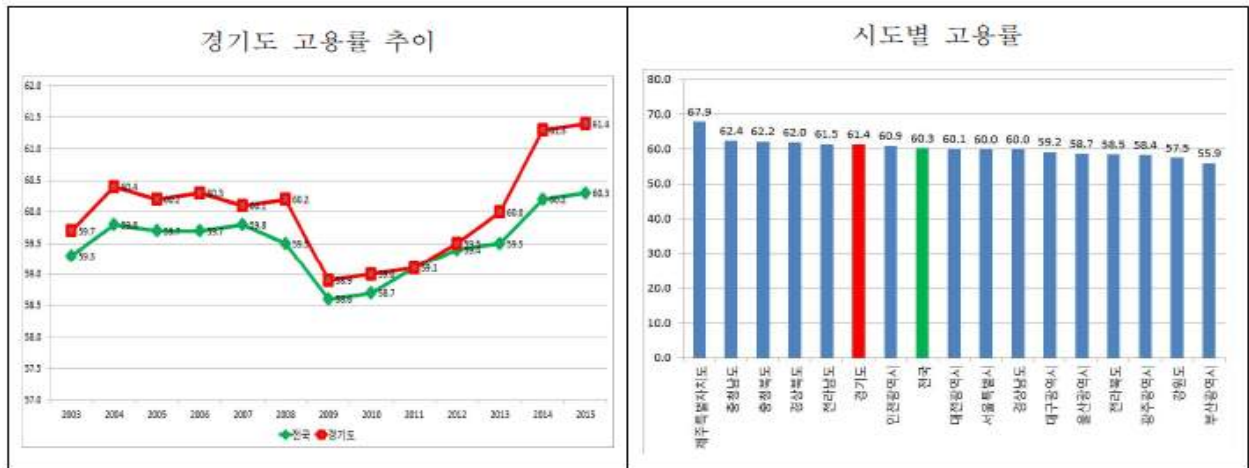


주 : (단위 : %), **경기 지표**, **전국 지표**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경제활동인구조사)

- 5 -

- 경기도이 고용률을 2015년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전국에서 6위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경기도 고용률 추이(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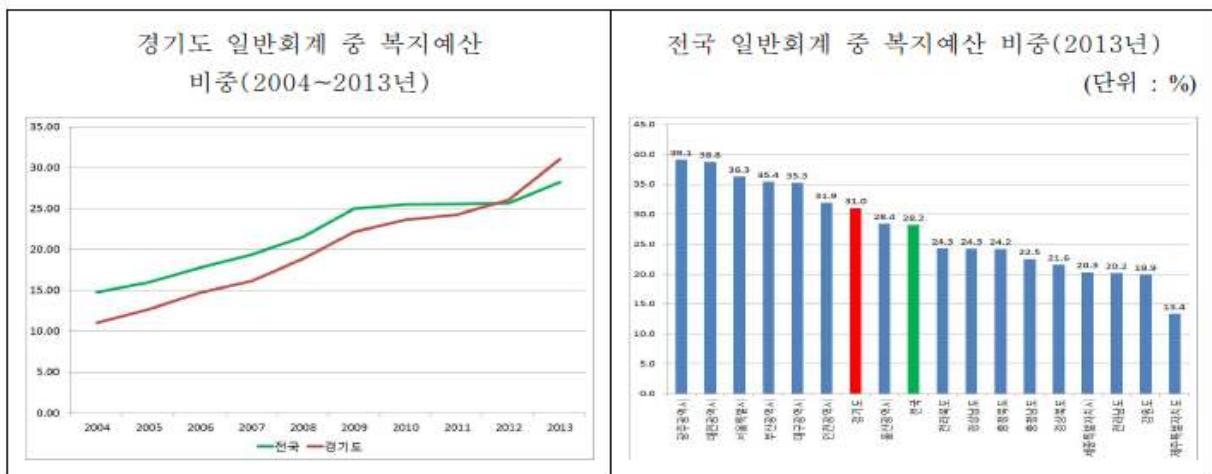
주 : 2015년 고용률은 2015년 전반기 고용률임 (단위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경제활동인구조사)

경기 지표 전국 지표

- 6 -

- 경기도 복지예산 비중은 2004년 전체 1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31%를 기록
 - 전국평균(28.2%)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국 시도와 비교했을시, 중위권을 유지

<경기도 복지예산 비중(2015)>



자료 : 통계청, 일반회계중 복지예산(사회보장)비중

- 7 -

Ⅲ | 민선 6기의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

경기도 민선 6기의 복지정책 방향: 타겟형 복지 및 공동체 기반 복지

□ 최근 우리나라는 공공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수준은 아직 낮은 반면, 지방의 복지재정 부담은 날로 심각화

- 민선 5기 경기도 복지정책이 무한돌봄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전달체계 효율화가 추진되었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로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 두루누리 사업,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의 사업 확대로 인하여 이에 대응하는 경기도 복지업무 및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정부 복지지출 변화 : ('08)69조원 → ('10)81조원 → ('12)93조원 → ('14)106조원
 - 경기도 복지에산 규모 : ('14)5.57조원, 총예산의 34.9%)
-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일반적, 보편적 복지로서 향해하고 있다면, 지방정부의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보완하는 타겟형 복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8 -

- 지방정부의 복지는 생애주기별, 계층별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사회보장 체계를 만들어낼 필요
- 또한 한국 사회복지의 최대 과제인 고령자 복지를 강화하고,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사회보장 체계를 만들어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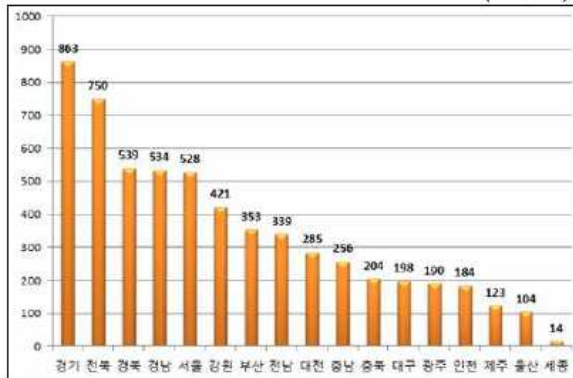
□ 지역사회에 산재한 공동체 자원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활용한 공동체 복지 실현

- 2013년 현재, 국가, 지자체 등에 등록·허가된 공동체는 5,885개이고, 경기도에 가장 많은 863개의 공동체가 존재
 - 경기도는 문화형(35.7%), 지역경제활성화(20.9%), 생활환경개선(15.8%), 복지형(14.6%)의 순의 활동 내용을 보이고 있음
 - 경기도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후 본격적으로 공동체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과천시 '탁아소 건립 청원운동(1991)'은 지방자치법 도입 이후 최초의 공동체 조례 청원사례.

-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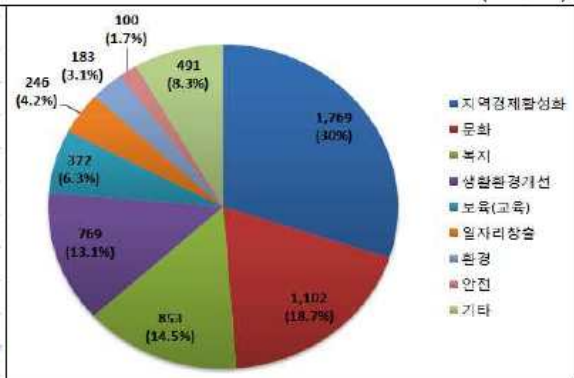
< 시도별 공동체 현황 >

(단위: 개)



< 공동체 활동 내용 >

(단위: 개)



자료 : 김현호(201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전국 대비 17.7%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 규모(2013년 말)
 - 경기도 사회적 협동조합 규모는 전국대비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하고 있으며, 인증 사회적기업 또한 전국 대비 1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0 -

<전국 대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비중>

(기준: 2013년 말)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총계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경기도	151개소	215개소	451개소	35개소	161개소	167개소	1,013개소
전국	950개소	1,537개소	3,210개소	111개소	1,162개소	1,340개소	6,970개소
비율	15.9%	14.0%	14.0%	31.5%	13.9%	12.5%	14.5%

민선 5기의 무한돌봄사업을 타겟형 복지사업으로 전환

- 무한돌봄 사업의 근간인 정부의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

- 정부의 긴급복지사업 대상자가 2015년부터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로, 2016년 기준 중위소득 75%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한돌봄사업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
 - 사업이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전체 예산의 60%를 만성적 빈곤가구 지원이 차지하면서

- 11 -

예산 운용의 폭이 좁아짐

- 또한 사업의 현금 위주 지원에 따른 수혜자의 도덕 해이 현상이 나타남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해 정부의 국민기초수급자나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현금에서 현물위주의 지원으로 전환
- 생계비 지원 대신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현물이나 서비스(주거환경개선 의료검진, 재활치료 등)를 제공
-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의 및 사례관리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행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 고령자들의 문화복지 및 주거복지에 대한 욕구 증가에 대응한 타겟형 사업 도입

- 고령자들의 문화즐김 유형이 다양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예상고객,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노인이용공간을 문화즐금센터로 명명하고 선정·지원
- 경기도 고령자를 위한 주거(양로시설), 요양, 요양병원, 여가시설 등이 잘 갖춰진 복합시설을 건립·운영
 - 주거 및 요양시설 :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차상위, 서민계층 등
 - 여가시설 : 시설입소 가족은 물론 일반인도 누구나 이용 가능

- 12 -

□ 현행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일자리 사업을 사회적일자리로 통합

- 기존 기초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으로 각 복지 업무분야별로 독립적으로 이뤄지던 복지일자리 사업을 사회적일자리로 통합하고, 보건복지국내에 사회적일자리과를 신설
- 복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무관심 영역으로 남아있던 청년복지를 사회적일자리 분야로 흡수
 - 대표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은 취약계층 근로청년(18~34세)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근로청소년일 경우,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후 1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가 10만원을 매칭 지원
 - (지원내용) 1:1 매칭(본인저축 10만+도비지원 10만) + 민간후원금(20만원(1:1) X 36개월 + 이자 + 민간후원금(2) ≈ 1,000만원 수령)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 인력 역량 강화

□ 민간 복지시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 민간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수교육, 스트레스 해소 지원, 상해보험 의무화를 추진

- 13 -

- 시군 시설 사회복지사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하여, 출산휴가·유아휴직 시 대체인력 선발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성을 확보

□ 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제도 구비

- 복지담당 공무원 업무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정책 부재 현상과 개인별 업무능력 차이에 의한 복지서비스 품질 차별화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제도 활성화
 -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2008년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 사회복지사에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
 - 복지담당공무원의 신규 및 보수교육 지원과 교육 참여시 인사 평점에 반영
 - 신규 복지직 공무원의 단기간의 역량강화와 현장적응을 위해서는 3-4개 인접 동을 묶어 1인의 슈퍼바이저를 지정·운영
 - 슈퍼바이저 제도를 이용하여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찾아가는 현장형 방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복지직 공무원 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업무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소통과 관계 구축

-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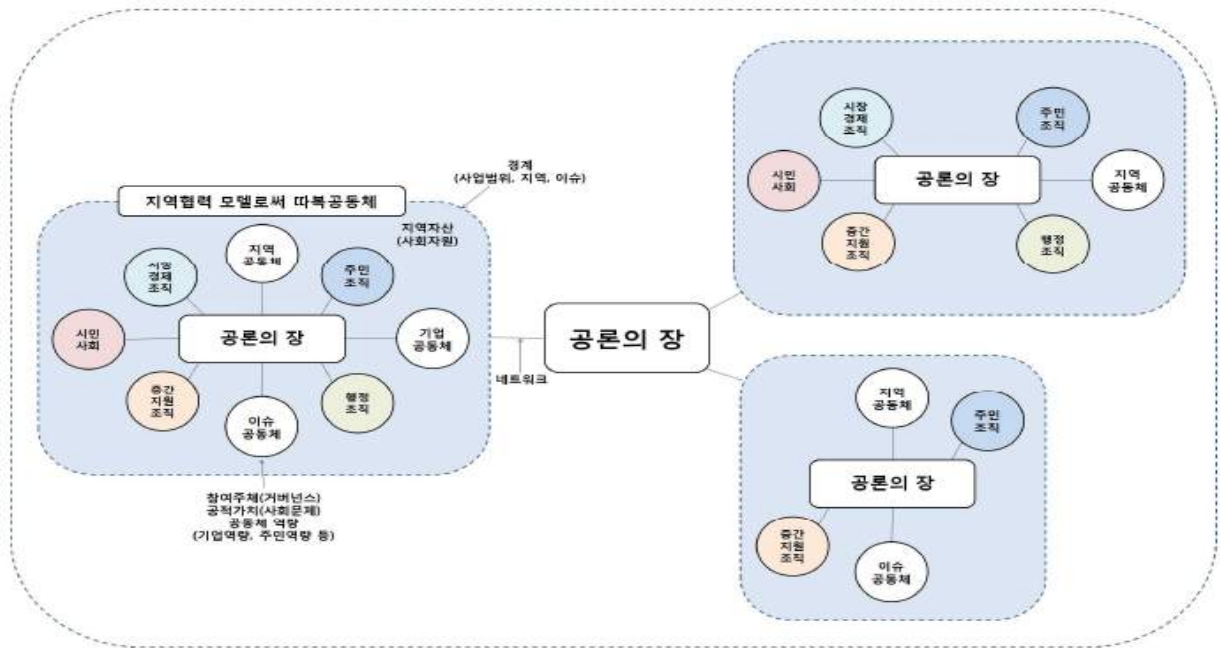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건설로 지역 단위 공동체 복지 구현

□ “따복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과 사회적경제 사업을 융합하여, 지역단위 복지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개발 추진

- “따복공동체”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모든 공동체활동으로 정의
 - 따복공동체 사업은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이 공론의 장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배양하고, 지역 및 공공부문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사업
 - 경기도는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도내의 중간지원조직이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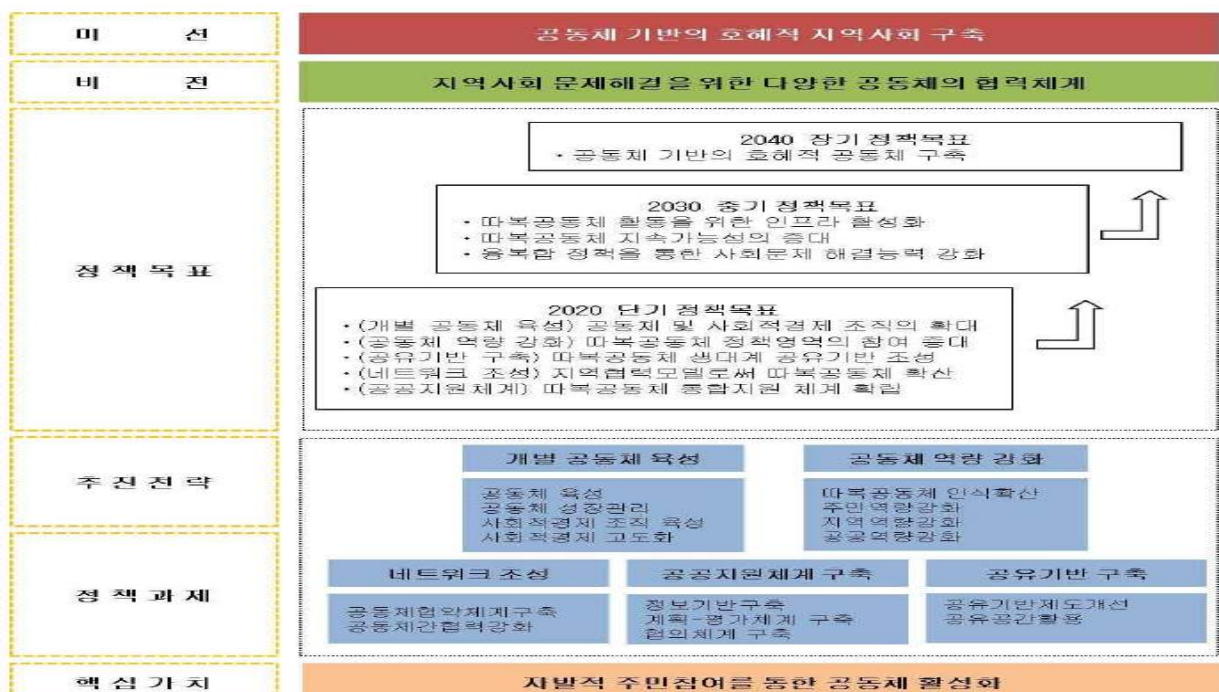
<따복공동체 개념도>

- 15 -



- 따복공동체가 경기도 공공복지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민들의 자립적 지역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

<따복공동체 체계 및 장기계획도>



□ **따복공동체 사업과 복지 정책의 유기적 융합을 위하여 2014년 기존, 정무부지사직을 사회통합부지사로 변경**

- 사회통합부지사 산하에 여성·복지·환경·따복공동체 사업단을 설치함으로써 사회통합부지사가 독립적으로 관련 업무를 융합·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개편 실시
 - 경기도는 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연정을 통하여 사회통합부지사 직을 야당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공동체와 복지 정책의 연계 및 융합을 독립 정책영역화 함

- ① 사회통합부지사가 4개 조직(보건복지·환경·여성가족국·대외협력담당관) 인사권·예산권 가짐
- ② 6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가짐(경기복지재단·경기의료원·경기가족여성연구원·경기영어마을·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평생교육진흥원)
- ③ 재정처연합이 결격사유를 이유로 사회통합부지사 소환 결정을 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이에 응함
- ④ 사회통합부지사 임기는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 ⑤ 여야 정책협의회를 총 10명(여야 각 5명)으로 구성
- ⑥ 경기도 기간제근로자 등에 '생활임금(최저임금보다 30~50% 많은 임금)' 지급 추진
- ⑦ 남북평화 협력 위해 DMZ 평화공원과 쌍둥이 개성공단 조성 등을 위해 노력
- ⑧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 위해 노력
- ⑨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행
- ⑩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자원하기 위한 규칙 제정 등 제도화 추진

경기도
연정 관련
주요
합의사항

자료: 경기도